



정부,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발표

채원영 연구원

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신용카드의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, 직불형 카드의 이용 활성화를 골자로 한 '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'을 발표하였음.

- 신용카드 발급기준과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합리화하고,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와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제한하여 신용카드의 신규발급과 과도한 사용을 억제함.
 -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자로서 결제능력이 있고 일정한 신용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토록 함.
 -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 책정 시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결제능력, 신용도,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함.
 - 영업행위 수용의사를 표명한 회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이용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를 허용하고, 전화 마케팅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임.
 - 충동적 카드 발급을 유도하는 부가서비스 제공행위 제재,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을 개선 함.
 - 또한 카드사 자율적으로 휴면카드를 정리하도록 하고, 카드사의 휴면카드 해지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휴면카드를 줄이도록 유도함.

-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 개선, 「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」 제정, 가맹점별 수수료율 조회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함.
 - 현행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카드업계 스스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토록 함.

- 가맹점 가입신청 후 철회 및 계약 해지권 부여, 신용판매대금 지급 보류 사유 최소화, 카드사가 가맹점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전 통보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」을 재정하여 가맹점의 권익을 제고하도록 함.
 - 이밖에도 가맹점별 수수료율 조회시스템 구축, 가맹점 수수료율 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놓았음.
-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직불형 카드 이용 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, 전업카드사의 은행 계좌이용 허용, 은행계좌이용 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임.
- 소비자들이 직불형 카드의 장점을 인식하고 신용카드에 우선하는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결제가능 시스템 구축, 신용카드 수준의 가맹점 확보 등을 통해 직불형 카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함.
 - 또한 2012년부터 신용카드와의 소득공제율 차등 폭을 확대하고,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며, 직불형 카드 이용실적을 개인신용등급 산정 시 반영하는 등 직불형 카드 사용자에게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.
 - 전업카드사의 은행 계좌이용 허용, 은행 계좌이용 수수료 인하 등 전업 카드사의 체크카드 보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은행의 IC직불카드 보급 환경을 개선하여 전업 카드사와 은행의 적극적인 직불형 카드 영업을 유도함.
 - 가맹점에 직불형 카드 단말기 설치를 권장 하는 등 가맹점이 직불형 카드를 적극 수납하도록 유도함.
 - 또한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·관 합동의 ‘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’을 구성·운영함.

(금감원 보도자료 등, 12/27)